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충실방안

대동간호전문대학 간호과 권숙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과정에서 각종사고에 의한 인명손실의 증가와 산업재해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양상도 신속한 응급처치여부에 후유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많아지고 있다. 전국민의 의료보험실시와 국민의식 향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선진 외국의 응급의료체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응급의료의 본질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응급의료의 인적자원, 환자이송 및 이송도중처치, 응급의료 통신망,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정에 맞는 충실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의 본질

응급의료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 의료체계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응급의료는 환자가 주체가 되며 환자의 상태,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의료의 각 분야에 걸쳐 응급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는 상황발생시 위험요소를 즉각 인지하여 발생현장에서부터 신속한 진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응급의료는 생명에 관계되는 의료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에 따르는 법적 문제도 자주 부딪힌다. 응급의료는 광범위한 의학지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응급의료는 여러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는 진료의 시작이며 계속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응급의료의 본질은 단시간내에 한정된 자원하에서 환자의 생명에 필요한 치료를 행하는 일이기에 의료의 기점이 된다.

2. 응급의료 전달체계

응급의료 전달체계란 일정 지역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요소를 조직화한 체계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기본 목표는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는 인적자원, 환자이송 및 이송도중처치, 통신망, 병원 단계의 집중치료 등의 요소가 있다.

인적자원이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간호사, 의료기사, 이송요원 등의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의료인력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운영에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환자이송 및 이송도중의 처치는 병원전 단계처치로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현장처치와 이송하기 위한 이송교통수단 이동 통신체계 이송요원의 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통신망은 응급환자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체계, 신고처리체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응급지령센터와 구급차간 통신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간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유, 무선 통신체계이다. 병원단계의 처치란 환자의 상태정도와 발생지역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옮긴후 신속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병상, 시설, 장비를 보장하는 것과 병원간 및 병원내의 응급의료 진료체계를 말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실행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지역 의료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충실방안

1) 인적자원

모든 의과대학교육에 응급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의사국가시험에도 응급의학에 관한 사항을 확대 실시하며 졸업후 의사 연수시에도 D.O.A. 등 응급환자 구명에 필요한 연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의료 기술향상을 위하여 고

도의 응급의료 기술을 연수 받도록 하여 유능한 응급의학 전문의로써 그 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응급전문 간호사의 현장 교육기관을 개설하여 졸업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고도의 응급간호술에 대한 수련을 거친 후 응급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한다. 의사, 간호사 이외의 마취과 의사, 방사선 기사, 병리기사 등의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직제나 on-call제도를 실시하여 수술이나 각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에 응급의료 연수병원을 지정하여 연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응급의료에 종사하는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2) 환자이송

(1) 이송수단

구급차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초창기에는 구급차를 이원화하여 일반구급차를 각 소방서에 1대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각 행정구에 1대씩 고규격 구급차를 배치하며 점차적으로 고규격 구급차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구급차는 국가나 지방단체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고 개인의 구급차 운행은 불허하도록 한다.

고규격 구급차에는 전동 방지 스트레처카, 심전도모니터, 인공호흡기, 반자동 심실제세동기, 흡인기, 기관내 삽관세트, 수액세트 등이 차내에 비치되어 구명처치가 충분히 될 수 있어야겠다. 기본적인 구명처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 등의 구명 kit개발이 필요하다.

(2) 이송요원

현재의 119 소방구급대원에게 교과과 훈련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현 소방서 직원으로 년 96시간의 응급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응급대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급대원으로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른 후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급대원을 위한 표준적인 교과과정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과정에 응급구조과를 신설한 일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로 전문대학에서는 응급구조학과의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고도의 응급처치 및 이송도중의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기도유지 및 관련장비의 사용기술, 심전도 감시장치의 판독능력, 처치방법, 심폐소생술, 제세동술과 소생술에 필요한 약제사용, 흡인장

치 사용법, 후두경 사용법, 척추손상 고정술, 회상 처치, 속방지 바지 사용법, 각종 지혈법 등의 높은 수준의 응급처치 기술을 숙련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응급내원과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3) 통신망

각지역 단위로 소방서가 중심이 되어 119응급지령센타를 설치하고 환자신고에서 부터 구급차 출동 지시 및 각 병원간의 연락을 지역단위로 중앙통제 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대원이나 응급구조사와의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Hot-line제도 도입을 모색해 본다. 응급의료센타에는 Critical-line을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Emergency-line을 설치한다. 응급의료 기관간의 연계진료와 협력을 위해서는 병원간의 영상 전송 시스템도 개발 되어야 한다. 응급의료 전달체제중 통신망 만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4) 응급의료시설의 체계

응급환자의 상태정도에 따라 1,2,3차 응급환자로 구분하고 환자정도에 따라 1,2,3차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도록 한다.

1차 응급의료기관은 일반개업의원이거나 보건소로 하며 지역단위의 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윤번제나 당번제로 야간 및 휴일에 입원이 필요없는 응급환자의 외래진료를 담당 하도록 한다.

2차 응급의료기관은 지역내의 의료실정, 거리, 교통,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생명의 위험은 없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응급환자를 담당하도록 한다.

3차 응급의료 기관은 지역응급의료의 중심핵이 되는 시설로 현재의 3차진료병원과 응급의료센타로 한다. 이곳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중증 다발성 외상, 심장순환기 질환, 중독, 열상 등의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로 집중치료를 필요로 하는 3차 응급환자를 담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각 지방단체와 의료기관, 병원협회가 협력하여야 하며 각 응급의료기관의 연락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5) 응급의료의 재정책 기반확립

응급의료는 의료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료로 응급의료의 없다면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적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보험진료 보수도 현실에 맞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응급처치 후 미수금 발생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의 비 재산성을 감안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책 지원장치를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충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국민의 이해와 협력

1년중 1주간을 응급주간으로 지정하여 각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는 각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직장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강습회를 개최한다.

C.P.R. 수강자에게는 C.P.R. 수강증명서를 수여하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보건관계자, 교원, 경찰관들이 응급처치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응급처치법을 첨가시키고 운전면허 취득시나 면허 갱신시에 응급처치법을 강습 받도록 한다.

국민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간지나 주간지 등 보도 기관지에 응급처치법에 대한 기사를 자주 실도록 하며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